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미술품으로 상속세 물납, 첫 사례 나왔다... 이만일 일출도 등 4점 허용

문화유산 및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첫 사례가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물납 신청된 10점의 작품 가운데 이만일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집합(Aggregation)08-제이유(JU)072블루(BLUE)'(2008), 쟁판즈(Zeng Fanzhi)의 '초상화(Portrait)'(2007) 2점이 물납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술품 물납제도는 2023년 상속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가운데 현금 비중이 작을 때 상속세 대신 미술품 납부를 허용한다.

그러나 아무 미술품이나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문화적으로 국가가 소장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미술품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납세자가 세무서에 신청하면, 세무서는 문체부에 통보하고, 문체부는 물납심의위를 열어 의결하면, 다시 세무서에 의결 결과를 통보해 물납처리를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미술업계에선 감정평가 및 경매시장 활성화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납된 미술품 등은 8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 수납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정책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루어 낸 결과"라며 "제도 시행에서 발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는 2020년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상속세 마련을 이유로 보물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은 것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이재용 삼성 회장 상속세 과정에서 '이건희 컬렉션' 기증 후 상속세 물납 허용 목소리가 세졌고, 미술시장에서도 새로운 먹거리로 기대감을 높였다. 2021년 말 상속세 미술품 물납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됐다.

### "수십억대 고급주택, 'A4 한장' 면적 차로 취득세 중과 면피"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기준이 불합리해 수십억원이 넘는 고급주택들이 취득세 중과를 면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위 20위 목록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중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중과받는 고급주택이 몇군데 나 될 거 같으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가) 160억부터 60억까지인데, 딱 (상위) 두 군대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18군데(곳)는 중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고급주택이 0.28㎡, 0.07㎡, A4용지 한 장 크기로 고급주택 중과를 피해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가 중과되는 공동주택 기준은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넘고,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경우다. 복층은 연면적이 274㎡를 넘는 경우 해당한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 취득 시 중과세율(8%) 적용된다.

최고급 공동주택들은 공시가격이 최소 수십억원에 달하지만, 연면적 기준이 고급주택 분류 기준에 불과 A4용지 한 장 크기 정도가 모자라면서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취득세 중과기준은) 건축물 가액을 따져야 하는데 면적만 따져서 조세 불평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행안부도 용역을 맡겼고, 정책제언에서도 심각한 조세불평등을 보이고 있기에 면적 기준을 없애고,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초과 누진세율을 과세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시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지적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게 1975년에, 오래전에 마련된 제도인데 그 공백을 많이 이용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지적하신 대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